

종합·해설

한미 FTA 발효만 남았다

이대통령 이행 법안 서명... 野, 총선연계 무효화 투쟁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를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한미 FTA 이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비준 절차

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게 됐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방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야권은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 서명을 계기로 투쟁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여권을 맹공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 전연직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에 집결, 이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

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무소속 조소수 의원 등도 이날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행법안에 서명하더라도 모든 것은 내년 총선 이후 바뀔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이며, 정권교체 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승강기가 벌어져서 현장에 나온 김홍재 정무수석에게 이를 전달했다.

민주당 한미 FTA 무효화 투쟁위는 이어 영등포 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토론회

“檢 과잉 권한”... 정치권도 재조정 기류

여야 의원들 ‘총리실 조정안’ 한목소리 비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수사권 재조정에 나설 기류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총리실의 조정안이 “검찰의 과잉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활동했던 일부 여야 의원이 ‘사법특위 재가동’까지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조정안의 ‘재조정’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홍 대표는 29일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쥐어 한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안을 마련, 청와대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물론 정치권 전 반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가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과 행안위 의원 12명,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경 관계자를 참석시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실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박노식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은 검사의 수사권 지휘에 관한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대통령령이 수사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한다면 위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의 개념, 입건 지휘, 수사 사무의 위임, 송치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인기 위원장은 추사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쪼개 총리실이 대면 토론을 한 번 한 후 일방적으로 강제안을 만들어 발표했다”면서 “이런 갈등을 일으킨 국무조정실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경찰 측 대표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은 “내사에 대

한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 수사 중단 송치명령, 선거·공안 사건 등에 대한 입건 지휘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을 만들기 위해 총리실 조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 대표로 나선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내사’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측은 또 검찰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달라는 경찰 주장도 적극적으로 논박했다.

이날 토론회장은 800여명의 일선 경찰들이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나친 수사통제... 경찰 독자성 훼손”

안재경 전남경찰청장

안재경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 “경찰이 검찰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받는 것은 기관의 독자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과정에서 잘했으나, 못했느냐 통제는 있어야 하지만

입건 전 단계에 범죄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관 하에 처리한다면 더 의욕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이런 차원에서 경찰 직원들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야5당 “비준안 서명 반대” 피켓 시위.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한미FTA 비준안 서명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판사들 ‘FTA 반대 글’ 확산

‘정치권 중립성’ 두고 사법부 내 이념 갈등 조짐도

현직 법관들이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판글을 올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표출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페이스북과 내부통신망 게시글을 올린 판사들이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들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 이념 갈등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29일 대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연수원 28기) 판사는 전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짧은 소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상황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글에서 “언론보도 몇 시간 만에 (한미 FTA 반대글을 올린) 부장판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며 “법관 개인이 페이스북에서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재판 공정성을 단죄하고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변 판사는 이어 “헌법에서 부과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사이에 법적 쟁점이 많다”며 “우선 일선 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한 다음 윤리위에 회부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최은배(45·22

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뺏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심의하겠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을 내렸다. 또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FTA 비판글을 쓴 창원지법 이정렬(42·23기) 부장판사는 KBS ‘개그콘서트’가 지난 27일 오후 “오늘 개콘 보면서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며 “개콘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계속할 거야”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WORLD FRIENDS KOREA

당신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WFK 한국해외봉사단 모집설명회 개최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WFK(World Friends Korea) 한국해외봉사단” 모집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해외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해외봉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일시 2011년 12월 1일 (목) 19:00~20:30
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교육장
문의 홈페이지 : www.koica.go.kr
 안내번호 : 1588-0434(한국해외봉사단 모집상담센터)
주최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빛의만평

- 김종두

만신창이

“민주당 예산 심의를” 전남 시장·군수를 촉구

“민주당은 하루 속히 국회에 등원해 새해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달라.”

전남의 시장·군수들이 ‘한·미 FTA’ 반대 투쟁과 관련, 새해 예산안 심의를 불이행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광주·전남 예산이 누락되는 지난 해와 같은 전철이 되풀이 되선 안 된다”며 “한·미 FTA 반대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종득·목포시장)는 29일 화순군청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